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목 차>

1.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구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 성 자	이름	최재석
	담당부서 (과)	화학제품관리과		직급	공업전문관
	국장	박용규		연락처	044-201-6806
	과장	신건일		이 메 일	jschoi1204@mail.g o.kr

2022. 04.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구체화								
	2.규제조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2조								
	3.위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29 ~ 2022.06.0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 규제 강화 필요								
	7.규제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구 또는 표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일반 국민</div> <table><thead><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head><tbody><tr><td>피규제자</td><td>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td><td></td></tr></tbody></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9.규제목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의 표시, 광고시 제한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오인 및 오해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제품의 표시 광고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오인,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제한 문구를 구체화하는 것임. ○ 실제 금지하고 있는 유사 표현을 포장재에 사용중인 제품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시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준과 표시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어, 유사표현을 포장재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발령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제품이 소진되어 포장재가 폐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또한, 해당 조문의 제정으로 기존 광고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으나, 간단한 문구의 추가 및 삭제는 비용 발생 없이도 가능한 것이 업계 관행이며, 전단지와 같은 형태의 기존 광고물이 있는 경우라면, 제정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전단지를 소진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별도의 폐기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p>제2조(표시·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문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순수(Pure), 순(純) 2.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천연,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4.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휴먼(Human), 피부를 사랑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제한 문구 구체화 필요
 - 현 규정상,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업계 혼선을 야기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사후관리에 일관성 결여
- ※ '21년 감사원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 결과 개선 필요 지적
- 표시·광고에 사용을 제한하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표시·광고시 사용제한 문구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제품의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 소비자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를 보고 제품의 위해 수준을 오인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 현행법에서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광고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 구체적 규정없이 운영되어, 행정청(지방청)별 자의적 해석에 따른 사후관리의 일관성 결여 및 업계 혼선을 야기

- 이에, “유사한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광고시 제한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위해성 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고 업계 혼선 최소화 및 감독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광고시 제한하려는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것으로 소비자의 오인·오해로 인한 제품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제품의 포장·광고시 제한하는 문구를 규정하는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광고시 제한하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오인·오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O	제품의 표시·광고시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를 규정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에서도 표시 또는 광고시 금지 문구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9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판단기준은 고시*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 규정상으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제한하는 문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제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하는 자들이 준수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중인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단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표시·광고 제한 문구의 사용 여부 관리감독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의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제품의 표시·광고 제한문구를 사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의 유형과 문구 표현들이 다양해 짐에 따라 유사한 표현의 구체화 규정 필요성 제기(감사원 감사, '21.3)
- 제정안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21.6)
- 제정안 관련 산업계 간담회('22.3, '22.4)

2. 향후 평가계획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의 표시·광고시 사용제한 문구 적용 여부를 관리할 예정

3. 종합결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제품의 위해수준에 대해 오인·오해를 주지 않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구체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기업·소상공인(제조, 수입, 판매, 유통자)
활동제목	표시, 광고의 제한 강화에 따른 기존제품의 포장재 폐기비용
비용항목	원재료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p>○ 동 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제도’ 및 ‘살생물제품 승인제도’를 운영 중임</p> <p>*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세정제, 방향제 등 39개 품목 지정, 안전·표시기준 준수 등 확인·신고 후, 시장 유통 허용 (21만여개 제품, 누계자료로서 단종제품도 포함 가능)</p> <p>(살생물제품 승인) 유해생물의 억제·제거 등을 위한 제품으로, 살균제·살충제 등 15개 제품 유형 有, 제품별 유위해성, 효과 효능에 대해 정부 승인 후, 시장 유통 허용(법 제20조에 따라 현재까지 승인된 제품은 없음)</p> <p>○ 생활 속에서 화학제품의 사용은 필요한 요소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p> <p>– 법 제34조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은 포장 및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미 규제하고 있음</p> <p>○ 이번 제정(안)에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표현 문구’를 업계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며,</p> <p>– 실제 금지하고 있는 유사 표현을 포장재에 사용중인 제품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함</p> <p>○ 또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시제품을 대상으로</p>

	<p>표시기준과 표시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어, 유사표현을 포장재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p> <p>- 발령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유예기간 동안 제품이 소진되어 포장재 폐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p>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의 일반 국민
활동제목	표시광고의 문구의 사용 제한 강화
편익항목	권리 증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제품의 위해 정도에 대해 오인·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구체화하여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국민 건강 피해 예방 등에 기여</p>